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4-30호 | 2024년 8월 19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‘민생회복지원금’, 소상공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정책

정 상 희 수석연구위원 (경제학 박사)

《 요약 》

■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

- 낮은 민간소비, 설비투자 등으로 내수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
-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면서,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
- 물가상승으로 원재료비 상승,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소비감소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에 적신호가 되고 있음

■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현상유지도 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악화

- 2024년 7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는 54.5, 8월 전망지수는 56.6로 계속해서 우하향 하고 있으며, 전통시장의 8월 전망지수는 45로 상황은 더욱 심각
-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상황으로 인해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,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은 1조4천억원

■ (정책대안1)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의 신속한 실행 필요

-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한 민주당 총선 공약이며, 여야가 합의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임
- 정부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할 필요

■ (정책대안2)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출증대

-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화
- 소비자가 찾아오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I. 국내 경기상황

○ 내수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듯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음

-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전기·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,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 내수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는 발견하기 힘든 상황
- 한국개발연구원(KDI)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(8월)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(2.6%)보다 0.1%p 하향한 2.5%로 전망
 - 민간소비와 관련하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기존 전망(1.8%)보다 0.3%p 낮은 1.5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설비투자 또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결과가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전망(2.2%)보다 크게 낮은 0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물가가 비상하면서 내수회복은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

-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의 생육부진 문제, 해충 피해 등이 나타나면서 농산물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(열+인플레이션)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발생
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8월9일 기준 다다기 오이 10개 소매가격은 1만3천원 수준으로 1년전 8,800원 보다 1.5배 가격 상승하였고, 출하량 또한 1년 전보다 2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같은 기간 애호박 1개의 가격은 1,600원 정도에서 2,100원 정도로 31%상승, 청양고추도 78.2%(864원→1,540원) 상승
- 농산물 가격 상승은 가게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는 재료값 상승 원인이 됨에 따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
- 근로자의 실질임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
 -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명목임금은 4,216천원으로 전년 동기(4,164천원)보다 1.3% 증가하였지만,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.0% 올라 실질임금((명목임금/소비자물가지수)*100)은 3,711천원으로 1.7% 감소
 - 통계청의 소매판매액 지수(2020년 100을 기준)는 2분기 102로 나타나 2023년 2분기 보다 1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22년 3분기(-1.7%) 이후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

[표1. 소매판매액 지수 추이]

	2022.2/4	2022.3/4	2022.4/4	2023.1/4	2023.2/4	2023.3/4	2023.4/4	2024.1/4	2024.2/4
소매판매액 지수	105.9	106.3	107.8	102.0	103.7	102.9	105.5	100.6	102.1
전년동기대비 증감	0.7	-1.7	-4.4	-2.4	-2.2	-3.4	-2.3	-1.4	-1.6

자료: 통계청

주: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0년이 100으로 기준

II. 소상공인 경영환경

○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현상유지도 힘들만큼 나빠지고 있는 상황

-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, 2024년 7월 체감지수는 54.5, 8월 전망지수는 56.6로 여전히 낮은 추이를 보임
- 특히,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여전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 못하며, 작년 같은 달 경기전망수치와 비교할 경우 올해 경기 상황이 작년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함
 - 2023 7월 체감/전망 BSI 57.3/83.6 → 2024 7월 체감/전망 BSI 54.5/56.6
-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보다 BSI 지수가 더욱 낮게 나타나 내수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

[그림1.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 및 전망 추이]

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4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(BSI) 조사

주: BSI지수가 100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, 100미만 일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의미

○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상황은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며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

-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(2024.6)에 따르면,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1/4분기 700조원에서 22년 3/4분기 1,014조원으로 코로나 기간 300조원 가량 증가한 이후 2024년 1/4분기말 1,056조원(대출차주수는 312.6만명)으로 증가
- 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2022년 0.50%에서 2024년 1/4분기 1.52%로 1%p 이상 상승
- 주요 생계형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연체율이 올해 2분기 1.72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, 이는 레고랜드 등으로 부동산 부실과 관련하여 큰 파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(1.22%) 보다 높은 수준
-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은 1조4천억원 가량으로 갈수록 이번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으로 향후 부실채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

[그림2. 업종별 연체율 및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]



자료: 한국경제 24.8.7 기사, ‘“요즘 모텔 왜 가요” 하더니..줄줄이 터질게 터졌다’.

○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

- 심각한 내수부진 속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
-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지금 당장 매출회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관련된 정책은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확대하는 것 한가지 뿐이라고 할 수 있음
- 대출지원, 고정비용 부담 완화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해당 정책은 매출회복 정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비용절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선 매출회복 후 비용절감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

Ⅲ.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정책대안

○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의 신속한 실행 필요

- 8월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
-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5만원~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소비활성화를 바탕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
-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진정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거부권 행사는 하면 안됨
-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통과에 노력할 필요
- 경기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으로 여당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반대하는 것은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

○ 정부·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‘현금 살포법’이라고 매도하는 등 민생회복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음

- 민생회복지원금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대두되고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됨
- 정부·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현금 살포법,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등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대체할 만한 정책방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
-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, 미국과 유로, 일본, 영국, 한국 등 주요국의 근원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 지속됨에 따라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근¹⁾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임
-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, 최근 공급측 상품 물가의 안정으로 전체 물가 및 근원 물가도 둔화
- 최근에는 물가가 안정화 단계에 직면한 대신,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

1) KB금융그룹, KB의 생각(2024.5.41), 글로벌 경기의 확장 지속과 물가압력 둔화.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지금 당장 매출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는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야당에서 제안하는 정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
- 특히,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수경기 회복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영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

○ 정부의 역할은 충분한 검토 후 정책 실행 또는 대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
- 코로나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이 지급을 바라고 있다면 정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함
- 이미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안으로까지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 만큼 정부는 짧게는 4~5개월 정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동안 반대의 입장표명 말고는 제대로 나온 대안이 없음
- 정부 대안이 없다면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완 등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함
- 민주당 등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역으로 야당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평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

○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

- 지역화폐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·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임
-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
- 지역의 소비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하여,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등을 의무

○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찾아오는 골목상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별 골목상권활성화단체 설립 지원을 통한 현장중심의 상권활성화

- 지역의 소비자, 골목상권 상인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설립 지원으로 현장 중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(상권관리기구의 설치) 4.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, 상인,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 지역의 특정 업종, 특정 업종 지역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등 관련 모델 개발
 - 골목형상점가는 조례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기본 요건은 2000m²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
 -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역사·문화·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시장·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의미
 - 골목상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, 지역의 자원과 골목상권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개발 등
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디지털 교육을 비롯한 역량강화를 지역의 주민과의 협업을 비롯하여 골목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
 -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, 취업준비생, 학생 등이 디지털 교육 등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을 것임